

제1절 대북 화해협력정책 추진

분단이후 우리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의 내용은 당시의 국제정세와 남북간 역학관계 등 환경적 요소에 따라 변해 왔으며, 다소 시차는 있지만 크게 볼 때 국제냉전의 확산·조정·해체 등의 변화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해 왔다.

1. 「국민의 정부」 이전의 대북정책 개관

분단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는 국제냉전질서의 확산과 함께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가운데 치열한 대결로 일관했던 기간이라 하겠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초대정부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UN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이는 정부수립 당시의 국제법적, 도덕적 우월성에 기초하여 북한당국을 철저히 부정하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방법론적으로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특히 UN을 통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북한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를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1960년 4·19혁명으로 출범한 장면 정부도 ‘UN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하는 등 약간의 변화는 보였으나 기본적으로 이승만 정부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한편 1961년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초기 ‘반공태세의 재정비·강화’와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에 주력한다는 이른바 「선 건설, 후 통일」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월 10일 연두교서를 통해 정부의 통일방안은 UN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통일, 실지회복에 의한 국토통일임을 밝히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다. 통일의 길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동·서간의 냉전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68년 7월 닉슨독트린이 발표되고, 1970년대에 들어 미·중, 일·중의 접촉과 미·소·일·중 4국간에 새로운 세력균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1960년대 우리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남북간 역학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게 됨에 따라 대북정책도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은 제2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한간 선의의 경쟁을 촉구하는 「평화통일구상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1971년 8월 12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적십자회가 수락함으로써 분단 26년만에 인도적 문제에서부터 남북대화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 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과 상호방문을 통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당국간 합의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남북대화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이른바 대화환경의 개선, 군사문제의 우선해결 등을 요구하며 통일전선전략을 노골화함으로써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남북관계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1981년 3월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하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1982년 2월 1일 이의 후속 실천조치로서 20개항에 걸친 구체적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였다. 특히 1984년 9월 8일 북한의 대남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우리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84년 11월 15일 개최된 남북경제회담을 시작으로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열리고,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이후에도 남북간 대화는 계속되었으나, 북한이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세우며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처럼 이 시기는 국제냉전이 조정국면에 들어섬과 함께 남북관계도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는 바, 기본적으로 체제경쟁에 주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모색하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때로는 대화를 통한 화해분위기가, 때로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는 ‘대결과 대화가 교차되는 관계’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1980년대 후반 국제냉전이 해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또 한번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되었다. 우선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이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세계적으로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국제 냉전의 해체에 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1988년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다. 또한 그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1990년 8월 1일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시대의 개막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함께 노태우 정부는 1989년 9월 11일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남북고위급회담이 1990년 9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었다. 또한 제7차 회담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1992년 9월에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1993년 1월 29일 모든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도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하였으나,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제재조치에 ‘서울 불바다’, ‘전쟁불사’ 등 발언으로 위협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후 미·북한간에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제네바 기본합의서’가 채택(1994.10.21)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한편,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호응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그 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하였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1995년 6월부터 10월까지 국내산 쌀 15만톤을 직접 지원하는 등 북한동포의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대북 경수로지원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북한의 회피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는 경색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2. 대북 화해협력정책 추진 배경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천명한 것으로서,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입장하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흐름과 북한 및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가. 탈냉전과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

1980년대 동구 공산권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구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제적 냉전질서가 종식되었다. 이후 세계는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화와 정보화, 개방과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오고 있으며, 과학·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바탕으로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아·환경·테러·마약 문제 등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 역내국가 내지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할 사안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어느 나라도 혼자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으며, 세계 모든 나라는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장벽을 넘

어 화해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미·일·중·러 주변 4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그들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어 도전과 기회라는 양면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제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반세기에 걸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민족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대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21세기 우리 민족의 장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정부는 이 같은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 관계를 불신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체제는 이미 실패했고 변화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채, 고립과 폐쇄의 길을 고집함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는가 하면, 이른바 에너지난·식량난·외화난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계속 증가하는 등 체제이완현상이 나타나면서 한때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이나 한반도 주변정세를 볼 때,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점진적인 개방·개혁 정책을 통

해 체제생존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한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동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이후 조심스럽게 변화의 조짐을 보여 왔으며, 특히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가격·수익성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가 하면, 관료들을 서방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보이며,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 같은 변화가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일단 북한이 변화의 방향으로 들어선 이상 앞으로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폭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라고 하겠다.

이 같은 북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에 입각하여, 정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 남북간 국력격차의 심화와 우리의 주도적 노력 필요성

분단이후 남북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체제경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남북간 국력격차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남북간 체제경쟁에서도 우열이 분명히 드러났다. 특히 1980년대 말 구 소련의 해체와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사회주의에 대한 역사적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과 남북간 체제 경쟁이 더 이상 무의미한 것임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남북간에 차이가 현격해졌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비록 병력면에서는 다소 우위에 있으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충분한 역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남북간 국력의 차이로 볼 때 우리의 군사적 역지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긴밀한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대북 군사 억지력은 일층 확고해 질 것이다.

이 같은 남북간 역학관계를 감안할 때, 21세기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끌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간 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어 우리 민족의 보다 나은 내일을 여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 실현해 나가야 하는 민족사적 소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우리의 대북 군사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주도적인 입장에서 남북간 공존공영을 실현함으로써 21세기에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민족의 번영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역사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3. 대북 화해협력정책 목표, 원칙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오고가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③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추진을 대북정책의 3 원칙으로 천명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유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토대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실현하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가 평화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때 북한도 무력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변화의 길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에 근본적 변화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고, 남북의 대규모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기본과제이다. 아울러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한반도 안보환경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평화를 지키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평화를 지키는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평화를 만들어 가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나. 일방적 흡수통일 배제

통일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단순히 체제나 영토를 통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가치가 구현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여건을 꾸준히 마련해 가는 긴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욱이 남과 북은 반세기에 걸쳐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대결하고 반목하면서 살아 왔기 때문에 상호 이질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타방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거나 급작스런 통일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으며, 실현된다 해도 그 충격과 부작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과 서독의 경우 오랜 기간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당장 법적, 제도적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를 바탕으로 단계

적·점진적으로 통일을 실현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우선 남북간 평화공존의 관계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려는 것이다.

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 그리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 쌍방이 필요로 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간 화해협력은 상호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간에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근원적으로 약화·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하여,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철저하게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에서 화해·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4.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표명과 베를린 선언

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표명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도 신년사(1.3)에서 대북정책 중점사항으로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남북화해협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성의껏 제공하되, 상호이익·공존공영의 틀에서 경제교류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 국책연구기관간 협의를 제안하였다. 정부가 제안한 「남북경제공동체」는 교역과 경험 등 다양한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폭과 심도를 확대함으로써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남북관계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정부가 이와 같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표명하게 된 데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정책의 성과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연계하지 않고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부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경협 활성화 및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사업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 조성에도 합의하는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었다. 정부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표명한 것은 이처럼 현재 진행·발전되고 있는 남북간 교역과 경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은 상호이익을 확보하고, 민족경제의 통일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특히 남과 북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과 효과는 훨씬 크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남북 주민간 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촉진함으로써,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정부는 우선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참여하여 자본과 기술,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간에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하면서 북한의 경제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와주고, 궁극적으로는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베를린 선언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강연을 통해 대북 경제지원, 평화정착, 이산가족 문제해결 및 당국간 대화 등 한반도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화해·협력 선언」(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였다.

「베를린 선언」은 남북간 평화공존이 실현 가능한 대세가 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21세기의 개막을 맞아 남북 화해·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독일통일의 현장인 베를린에서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이다.

「베를린 선언」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당국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

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물론,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경협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북한 식량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농업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해 나가자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이 이루어야 할 현실적 과제는 냉전종식과 평화공존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공존공영의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통일은 엄청난 경제·사회·문화·심리적 충격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 남과 북이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넓혀 나가자는 것이다.

셋째, 이산가족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인도적 차원에서는 물론, 이산 1세대들이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성격상 남북당국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에게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 것이다.

넷째,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간 대화를 개최하자는 것이다. 당사자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남북문제를 자주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는 민족의 장전이다. 이런 견지에서 우선 남북 정상간 특사교환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등을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처럼 「베를린 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평화공존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실천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한 것으로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해 오도록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제2절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1. 비공개 특사 접촉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3.9)이 나온 직후 북측은 비공개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측에 특사 접촉을 제의하고, 이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 같은 북측의 제의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특사로 임명하고 북측 인사와 접촉케 했다.

남북간의 첫 특사 접촉은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북측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약칭 아태) 부위원장간에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이후 3월 23일과 4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특사 접촉을 두 차례 더 갖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최종 합의(4.8)하였다.

다음은 남북의 두 특사가 서명한 합의서 전문이다.

< 남북합의서 >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쌍방은 가까운 4월중에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00년 4월 8일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 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 지 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 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 호 경

남과 북은 2000년 4월 10일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2.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

「4.8 남북합의서」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이 판문점에서 4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5차례 개최되었다. 이 접촉에는 우리측의 양영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와 북측의 김령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를 단장으로 한 3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남북당국간 대화가 판문점에서 개최된 것은 199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이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

한 국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양영식(통일부 차관)	단 장	김령성(최고인민위 상임위 참사)
대 표	손인교(통일부 국장)	대 표	최성익(조평통 서기국 부장)
	서영교(통일부 국장)		권 민(아태 참사)

쌍방은 제4차 준비접촉과 제5차 준비접촉 사이에는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2000년 5월 18일 제5차 준비접촉에서 남과 북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4.8)한 데 따른 주요 실무절차 문제를 타결하고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준비접촉에서 남북은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가장 쟁점이 되었던 정상회담 의제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타결하였다. 이러한 의제 채택은 남북정상회담의 목적과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외에 분명히 천명하는 의미가 있었다.

준비접촉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을 최소 2~3회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정상간 논의의 기회가 최대한 마련되었다.

또한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간 위성통신망을 구성·운용하기로 하였고, 우리측 인원과 장비로 직접 촬영·제작한 TV 실황방송을 북측의 협조를 통해 위성중계 함으로써 7천만 거래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 < 주요 실무절차 합의내용 > —

- 대표단 구성
 - 수행원 130명, 취재기자 50명
- 회담형식과 횟수
 -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상봉과 회담을 최소한 2~3회 실시(필요시 추가)
- 회담 의제
 -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
- 선발대 파견
 - 방문 12일전 30명 파견, 판문점을 통해 왕래
- 왕래 절차
 - 항공로 또는 육로 이용
- 신변안전보장
 -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불가침을 원칙적으로 보장
- TV 실황중계
 - 실황중계를 위해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제작
- 위성 통신망 구성·운영
 - 기존 서울·평양 직통전화선과 함께 위성통신망 이용

쌍방은 준비접촉과 병행하여 통신·보도 실무자접촉(5.13, 5.17)과 의전·경호 실무자접촉(5.16)을 개최하여, 관련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통신·보도 실무자접촉에서는 대통령의 국가지도통신망(남북직통전화, 중국경유 광케이블, 위성통신 사용), 남북직통전화(30회선), 국제전화회선(30회선), 휴대용 위성장비 반입 보장 등에 합의하였다.

의전·경호 실무자접촉에서는 근접경호, 숙소경호 방식, 행사장 사전 점검, 경호장비(휴대품 탐지기 등) 반입, 비상구급대책(24시간 의료진 확보)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한편, 통신·보도, 의전·경호 실무문제와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측 선발대의 방북시 협의·확정되었다.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을 단장으로 30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정상회담 선발대는 5월 31일 판문점을 경유하여 평양에 도착, 남북정상회담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점검하는 한편, 통신·보도, 의전·경호 등 실무문제들을 북측 실무진과 협의·확정하였다.

북측은 정상회담 준비기간에 선발대 30명 중 일부인원이 교체되어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오가는 것을 보장해 줌으로써 우리측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였다.

3.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준비기획단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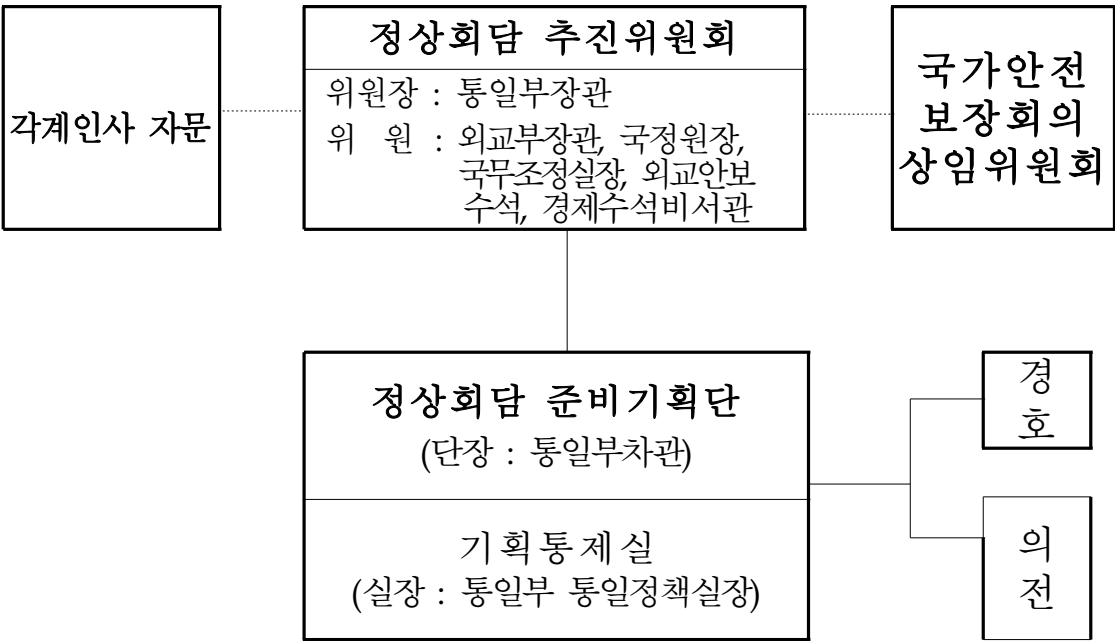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맞춰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2000년 4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와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6명으로 구성되어 7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총괄·지휘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합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국민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산하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통일부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외교통상부 차관보, 국방부 정책보좌관,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장, 재정경제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심의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청와대 경호처장, 통일비서관,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등 15명으로 구성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준비기획단은 정상회담 준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무적으로 기획·조정하면서 4월 22일부터 시작된 북한과의 준비접촉 과정을 뒷받침하였으며, 회담준비상황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준비기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비기획단 안에 사무처 성격의 상설기구로서 기획통제실(실장 :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두었으며, 여기에 통일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16개 부처 관계자가 참가하여 각종 점검사항들을 확인하고, 부처별 협조를 하였다.

<정상회담 추진준비 체계도>



제3절 남북정상회담 진행과 6·15 남북공동선언

1. 남북정상회담 진행

가. 진행 개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우리측 일행이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초 6월 12일부터 방문하기로 합의했으나 북측이 6월 10일 저녁 늦게 긴급 대남전 통문을 통해 “기술적인 준비 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토록 변경해 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해 옴에 따라 하루 늦춰진 것이다.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는 수행원 130명(선발대 30명 포함), 기자단 50명이 참가하였으며, 수행원은 공식수행원 11명, 특별수행원 24명, 일반수행원 95명으로 구성되었다.

《 공식 · 특별 수행원 명단 》

공 식 수 행 원	특 별 수 행 원	
박재규 통일부 장관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이해찬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손병두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회장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이완구 자유민주연합 당무위원	이원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임동원 대통령 특별보좌역	장 상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강만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주섭 대통령 경호실장	차범석 예술원 회장	구본무 LG 그룹 회장
황원택 대통령 외교안보수 석비서관	김운용 대한체육회 회장	손길승 SK 그룹 회장
박준영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장치혁 남북경협위원회 위원장
김하중 대통령 의전비서관	박권상 한국방송협회 회장	강성모 린나이코리아 회장
허갑범 대통령 주치의	최학래 한국신문협회 회장	백낙환 인제학원 이사장
	박기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장
	고 은 민족문화추진회 상임고문	이종석 새종교소남북관계연구실장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하는 우리측 일행은 대통령 전용기와 우리 국적 민항기를 이용하여 서해항로로 남북을 왕래하였는데, 남북간 왕래에 항공기가 사용된 것은 분단 이래 최초의 일이었다.

김 대통령은 서울을 출발하기에 앞서 ‘남북정상간 만남이라는 소중한 기회가 55년간의 불신과 반목의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교류협력, 그리고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첫 걸음이 되어

야 한다’는 희망을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공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지도급 인사들의 영접을 받았으며, 공식 환영행사 참가에 이어 의장대를 사열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며 회담을 나누었고, 숙소인 백화원초대소에 도착 직후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은 인사를 나누고, 정상회담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개략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월 14일 오후와 저녁에 백화원초대소에서 2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6월 14일 오후 3시에 시작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면서 통일 및 남북문제 전반에 대한 상호 입장을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양측 실무진들이 남북공동선언의 구체적인 문안을 협의하였다.

6월 14일 김대중 대통령 주최 만찬 후, 밤 11시 20분경 남북의 두 정상은 회담을 갖고 양측 실무진들이 작성한 남북공동선언의 문안을 최종 확인하고, 서명·교환하였으며, 6월 15일 0시 조금 넘은 시각에 내외에 발표하였다.

6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최 오찬을 끝으로 김대중 대통령 일행은 방북공식행사를 모두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대국민 보고를 통해 ‘남과 북은 공존공영으로 21세기에 세계 속의 일류 국가로 웅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남북정상회담 주요 일정 》

일 자	주 요 일 정
6.13(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일행 서울공항 출발, 평양 순안공항 도착 ○ 남북정상회담(제1회, 백화원 초대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문(만수대의사당) ○ 공연 관람(만수대 예술극장)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최 환영 만찬 참석 (인민문화궁전)
6.14(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공식 면담(만수대의사당) ○ 남북정상회담(제2회, 백화원 초대소) ○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 참관 (창광유치원 · 평양수예연구소 · 평양산원 등) ○ 정당 · 사회단체, 경제계, 여성계 인사간 접촉 (인민문화궁전) ○ 공연 관람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 대통령 주최 만찬 (목란관) ○ 남북정상회담(제3회, 백화원 초대소)
6.1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수행원(답공장) 및 특별 · 일반수행원(동명왕릉) 참관 ○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최 오찬(백화원 초대소) ○ 대통령 일행 평양 순안공항 출발, 서울공항 도착

나. 남북정상회담시 주요 대화 내용

분단 55년만에 최초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난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최고당국자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한다는 입장에 따라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4가지 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4개 과제와 관련 김 대통령이 강조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민족화해와 통일문제

국제적 냉전종식과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그리고 지식정보화로 인류사회가 최대의 혁명을 겪고 있는 세기적 전환기에 한반도만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남북이 대결해서는 안되며,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화해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솔선수범하여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당장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상호 체제를 존중하면서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고 이를 촉진할 수 있도록 남북연합을 구성해야 한다.

(2)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

남과 북이 상대방을 불신하고 침략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남과 북 모두 공멸하며, 누구도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반대하며, 우리는 북한을 해칠 생각이 없으니 북한도 무력을 사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북 제네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미·북간에 미사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지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이 미·일 등 관계국과 관계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북한의 이익에 부합될 것이다.

아울러 남북이 화해·협력하고,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면서 이미 합의한 바에 따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공고한 평화상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3)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항만·전력 등의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 등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밖에도 남북간 신뢰구축과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4)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들은 고향과 가족·친척들에 대해 절절한 그리움과 한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문제인 만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

남과 북이 협력해서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주고, 면회소를 설치하며,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 광복 55주년이 되는 2000년 8·15를 기해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자.

이상과 같은 김대중 대통령의 의견과 제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긍과 이해를 표시하였으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측

의 입장을 솔직하게 개진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밝힌 견해 중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남북이 대결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남북간에 협력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남북간에 구호나 원칙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데에 동감을 표시한 것도 과거 북한의 입장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

다. 기타 접촉

6월 14일 오후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 특별수행원들은 정당·사회단체, 경제계, 여성계 각 분야별로 북측 인사들과 접촉을 가졌다.

(1) 정당·사회단체 인사 접촉

우리측에서는 김민하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해찬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완구 자민련 당무위원, 강만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김운용 대한체육회 회장,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박기륜 한적 사무총장 등 13명이 참여하였으며, 북측에서는 김영대 민화협 회장, 한현욱 천도교 교무위원장, 최우진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 장웅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참사 등 6명이 참가하였다.

우리측은 체육·문화·경제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간 신뢰와 이해를 넓힐 것을 강조하고 남북국회회담, 남북작가회담 등과 체육분야에서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교환경기 개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북측 참여 등을 제의하였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적십자회담의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모든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방향이 결정되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잘 풀려 나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 경제계 인사 접촉

우리측의 김재철 무역협회 회장,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원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10명은 북측의 정운업 민경련 회장, 백

세운 조선컴퓨터회사 총사장, 그리고 개성총회사 및 아태 관계자 등 8명과 접촉하였다.

우리측은 대북투자 확대 및 남북경협 의사를 표명하면서 대규모 투자협력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협력과 경협의 제도적 장치(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측은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이 주로 우리측 경제인들로부터 남북경협에 대한 구상을 듣는 데 주력하였다.

(3) 여성계 인사 접촉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와 장상 이화여대 총장은 북측의 여원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천연옥 여맹위원장, 홍선옥 조선여성협회 회장 등과 만나 남북여성교류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2000년 7월 4일 북경에서 개최기로 한 「새천년 남북여성한마당」 행사에 직능단체별로 참가하는 방안을 제의하였고, 북측은 정신대 문제와 관련 남북 공동 제소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외 쌍방은 환경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2. 6·15 남북공동선언 주요 내용

가. 남북공동선언

< 남북공동선언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나. 조항별 의미

(1)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것으로, 당연히 그 운명의 주인인 우리 겨레가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하며, 남과 북이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통일 3원칙중의 하나로 합의한 바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재확인하고 있다.

민족문제이면서도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한반도 문제의 이중성을 감안할 때 우리 자신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자주’가 외세배격 등 배타적 의미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한 것임을 역설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북한이 자기 체제를 위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던 한·미·일간 국제적 공조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경제적 진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측의 이해를 촉구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자주적 해결은 북한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외세 배격, 미군철수 주장 등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겠으며,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남과 북이 주인이 되어 우리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을 의미한다.

(2) 남북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그 동안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면서 통일방안에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제시해 왔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1980년대 말 국회공청회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당장 통일을 이루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만큼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며, 우선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연합」을 이루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가자는 방안이다.

다시 말하면,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과도단계가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 하에, 이러한 통일준비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연합」을 하자는 것으로, 남북 정부가 현존 그대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와 민족동질성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닦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1980년에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안(이른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1국가내 2체제를 두고 연방정부가 외교권, 군사권을 갖되 2개의 지역정부가 자치를 하자는 것으로 남과 북 사이에 완성된 형태의 연방제 통일국가를 당장 이루자는 방안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연합제」안 설명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현실성을 인정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이 현존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상호협력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으로서 남북연합과 사실상 같음을 인정하였다.

이번에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분명히 과거의 「연방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연방제는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한 결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방안 다 통일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통일의 전(前)단계, 준비과정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두 정부간에 협력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각각 갖고 협력기구를 운영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셋째, 먼저 교류·협력과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간다는 측면에서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넷째, 남북 양측이 전제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과거 북측이 연방제 진입조건으로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의 전제조건

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3) 인도적 문제 해결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민족적 비극인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이산가족문제의 시급성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즉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 확인, 면회소 설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차근차근 추진하되, 우선 8·15를 기해 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공감하면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요구하였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수용하였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남과 북은 2000년 한해 동안, 쌍방 각기 100명씩 이산가족방문단을 2차례 교환(8.15~8.18 및 11.30~12.2, 서울·평양)하였고, 2001년 2월말에 1차례 더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3월에 300명 정도로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문제도 협의·확정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북측에 촉구하여, 제2차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시 납북자 가족이 방북하여 상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2000년 9월 2일 남쪽에 살고 있던 비전향장기수 63명을 북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조총련 동포들의 고향방문 사업추진도 합의하여 2차에 걸쳐(1차: 9.22~27, 2차: 11.17~22) 남한에 고향을 둔 조총련 동포들이 고향을 방문하였다.

(4)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및 제반 분야의 교류 활성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은 상호 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게 하며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견인차이다.

특히 남북경협은 상호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 민족의 복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경협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상호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함으로써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업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되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남한 내부에 머물렀던 경제 규모는 한반도 전체 차원의 경제 권역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 철도와 개성-문산간 도로를 연결하고 있으며,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개성공단 건설, 북측 어장 사용, 전력협력을 위한 공동조사 추진 등 남북간에 여러 가지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남북간의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는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경제협력에 못지 않게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남북은 예술단 교환 및 예술행사 공동 개최, 체육인 교환 및 공동 체육행사 개최, 언론인 방북, 관광단 방북 등을 실현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한 것처럼, 남북간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민족의 단합과 저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국제경기대회에서 남북한이 협력한다면, 남북 주민들의 심리적 결속을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한민족의 화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의 보건·환경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또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산업화에 따른 공해와 환경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피해가 우리측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과 환경분야에서의 남

북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처럼, 남과 북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를 비롯한 제반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5) 남북 당국자간 회담 개최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남북 정상이 아무리 좋은 선언이나 합의를 하여도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이에 남과 북은 양 정상에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로써 정상회담 개최 후 약 한 달 뒤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과 군사실무접촉,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협실무접촉 등을 통해 남북간 협력사업들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협의, 실천되고 있다.

한편,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며, 남북관계 개선이 한 순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은 본인 스스로가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 만큼 반드시 지키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남북간 합의에 대해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에 폭넓은 신뢰를 심어주게 될 것이며, 남북관계가 또 다시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3.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사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 분단 55년만에 첫 정상 만남 및 실천사항 합의 도출

남북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사건이라 하겠다. 두 정상은 2박 3일 동안 단독회담을 비롯한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상호 입장을 격의 없이 전달하고 공감대를 넓혔다. 그 결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갖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5개항의 합의사항을 도출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원칙적 합의를 양산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직접 합의·서명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또한 두 정상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앞장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남북 당사자간 해결 의지 구현

남과 북이 상호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한반도문제를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커다란 의의라 하겠다.

동서독의 예에서 보듯이, 분단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분단 현실의 인정, 즉 상호 체제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남과 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는 실질적 의미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상대방을 동등한 대화 상대자로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그 당사자인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었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변4국의 이해와 협조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당국간의 상시적 대화채널의 구축은 매우 의의가 깊다고 하겠다.

특히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간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가 무산되었을 때와는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제3국(인)의 개입이나 중재 없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교섭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남북간 화해협력의 제도화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동시에 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전략이다. 남북경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기술자·근로자의 접촉은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남북간의 효율적인 산업재편은 민족경제의 통합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 및 개성-문산간 도로 연결 사업을 시작했으며, 경협 관련 4개 합의서도 타결하였다.

한편,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남북간 신뢰의 회복이자 화해협력의 징표라 하겠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사이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되고 수 많은 이산가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산가족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인식하에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정상회담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장 실감케 해준 것이었다. 8·15 이산가족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이어 남북은 흩어진 가족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및 재결합 등 단계적, 제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시켰으며, 또 이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다양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한반도에서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상호 체제 존중과 긴장 완화를 통해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공존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사실상의 통일이다.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교류, 보다 많은 협력을 통해 남북이 서로 오가고 주고받고 돕고 나누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 동북아 평화에 기여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의 계기를 이끌어 냄으로써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두 정상은 상호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기로 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변화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긴장요인이었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는 자동적으로 동북아 전체의 안보환경에 중대한 위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주변국들도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도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라 하겠다.

마. 대북 화해협력정책 지속적 추진의 결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북측이 초기의 의구심을 버리고 당사자간 대화에 응했기 때문이다. 즉 남과 북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정부가 일관되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확인된 것도 의미가 큰 것이었다.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제4절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 상황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 말까지 짧은 기간동안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1. 남북간 회담의 다양화 · 정례화

남북장관급회담이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되고 남북 당국간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첫 회담이 개최된 이후 정례화되어 정치·군사·경제·인도 등 남북관계 전반을 이끌어갈 중심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남북간 현안을 협의·해결하는 것은 물론, 국방장관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국간 대화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남북연락사무소의 업무도 재개시켰다.

또한, 남북국방장관회담의 개최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등을 협의함으로써 안보와 화해협력이 병행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어 남북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된 군사 분야의 협조사항을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협의하였다.

남북경협실무접촉이 두 차례 개최되어 투자보장, 이종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 절차 등 4개 합의서가 타결되었으며, 「식량차관제공 합의서」도 체결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김용순 특사가 우리측을 방문하여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김용순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실천 의지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각종 문화·산업 시설도 둘러보았다.

남북적십자회담도 두 차례 개최되어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시범적으로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을 실시하는 문제에 합의하였으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협의를 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각종 회담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 차례의 특사접촉(3.17~4.8, 중국)과 다섯 차례의 남북준비접촉(4.22~5.18, 판문점), 통신·보도 실무접촉, 의전·경호 실무접촉,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포함

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남북사이에는 총 25회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한 해동안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이 단 두 차례 개최된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이며, 회담도 다양화·정례화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회담 개최 현황>

1998	1999	2000
총 2회	총 2회	총 2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당국대표회담(1회) ○ 대북 구호물자 제공관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1회) ※ 4자 회담(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차관급당국회담(2회) ※ 4자 회담(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특사접촉(3회) -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5회) - 통신·보도 실무접촉(2회) - 의전·경호 실무접촉(1회) ○ 남북장관급 회담(4회) ○ 남북국방장관회담(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군사실무회담(3회) ○ 남북경협실무접촉(2회) ○ 남북적십자회담(2회)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1회)

2.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실현시켰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남북 각 100명)이 교환되어 총 1,170명이 상봉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2차 방문단이 교환되어 총 1,020명이 상봉하였다.

남북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은 지난 1985년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이후 15년만에 재개된 것으로써, 남북이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신뢰를 쌓

아 가는 단계로서 의미가 매우 깊다. 특히, 남북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면회소 설치·운영 등을 본격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도 이산가족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우리측은 그 동안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들의 송환을 끊임없이 북한측에 촉구하여 왔으며, 다른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그 결과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한 노모는 1987년 납북된 아들을 상봉하였다. 이는 납북자 가족으로는 처음 상봉한 사례로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남북교류협력의 획기적 진전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남북은 투자보장·청산결제 등 경협 4개 합의를 채택하여 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개발 뿐 아니라,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개성공단 조성 등 대규모경제협력의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의 추진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민족경제의 동맥을 잇는 민족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간 직교역로를 확보함으로써 물류비용의 절감 등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의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길을 열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부상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미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착공식을 가졌으며, 200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간 경제교류도 크게 증가되고 있는데, 올해 남북교역은 4억2천5백만 달러로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남북간 인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2000년 한해 8천명 가까운 인원이 남북을 왕래하였다.

한편, 사회·문화분야에서는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남북교향악단 서울합동연주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하여 남북언론교류에 관한 합의를 채택하였고, KBS의 백두산 현지 생방송, SBS의 평양 현지 생방송, 한겨레신문 등의 방북취재가 성사되었다. 또한 우리측 관광단 109명

이 백두산을 관광하였으며, 2001년 3월에는 북측 관광단이 한라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금강산에서의 자동차질주경주대회 및 전국체전 성화 채화, 평양에서의 통일탁구 경기대회 등 체육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었으며, 종교분야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행사가 개최되는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이 추진되어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4. 북한의 변화 가속화

북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변화의 폭은 넓어지고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향후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개혁이 확대되고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한 것 자체가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에 협조해 오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중국을 방문, 중국의 지도자들과 중국식 개혁·개방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가 하면, 간부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연수케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 하겠다.

대외적으로도 ‘철천지 원수’라고 하던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유럽연합(EU)의 국가들과도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서방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시찰과 학습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00년 7월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2001년 새해에 들어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 새로운 사고와 방식을 강조하는가 하면, 중국의 대표적 특구인 상해시를 방문하는 등 개방과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와는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해방문 내용 등을 북한 보도매체가 대내적으로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5.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협력 증대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Korea” 이름으로 공동 입장하였는 바, 이는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 한반도에 넘치는 화해의 분위기를 전세계에 알려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남북한은 2000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를 계기로 남북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대외관계와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ADB·APEC 등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재외공관간에 협의채널을 구축할 것과 외무장관회담의 정례화를 제기하였다. 이에 북한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로 나가자고 하면서 UN총회에서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재외공관의 남북한 인사들간 교류도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 주재 우리 대사가 이·취임 인사차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였고,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는 우리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민방문시 공식환영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러한 남북의 우호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10월 제55차 UN 총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환영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및 통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UN 총회에서 한반도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197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아시아유럽회의(ASEM)에서도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이행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하는 ‘서울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으로 비롯된 남북화해 분위기는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6.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 진입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이 본격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000년 9월 남과 북은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

는 데 합의하였다.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러한 남북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관계정상화 협의를 본격화하고, 미사일협상, 경제제재 완화, 테러지원국 명단해제 협상 등을 추진하였다. 2000년 10월 북한 조명록 특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공동선언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 의지를 공식 선언하였다. 또한, 미 대통령의 방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양자관계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앞으로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북·미간 현안문제가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북간에도 2000년 들어 대북지원, 수교협상 개최 등 관계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으며, 영국을 비롯한 EU 등 서방국가와 북한간의 관계정상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던 북·미 적대관계가 해소되기 시작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되어감에 따라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